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고성윤 (前 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

김정일 사후 남북관계진전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들어 북한군의 도발이 잦아지고 심리전 차원의 '공갈협박'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7월 14일 사격도발에는 해안포와 방사포 100여 발을 포함 총 200여 발의 포,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단거리 무기가 동원되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은 일련의 사격이 점점 휴전선 가까스로 발사 지점을 옮기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주 표적 대상으로 삼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제거로 권력상층부의 안정은 확보하였는지 모르나, 민심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관계로 김정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일·러와 관계를 넓히고 있으나 실속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핵 무장화와 잦은 대남 도발에 더욱 목을 매는 이유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방안을 찾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필자는 우리가 취할 대북 심리전의 큰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중·단기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 시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통합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답을 찾고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 안 하고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東北亞) 안정을 위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목 차

1. 기본 인식
2. 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하는가?
3. 독일·베트남 통합과정에서의 심리전 역할과 교훈
4. 북한의 대남 심리전 양상
5. 통일대비 심리전 관련 정책 제안
 - 가. 대북 심리전 방향
 - 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1): 군사적·비군사적 조치
 -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2): 수행 방안

1. 기본 인식

-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대북 심리전은 북한정권의 ‘체질개선’ 및 통일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심리전은 정치 및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필수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¹⁾ 오늘날 심리전은 주체나 대상이 군 영역을 넘어 일반에게까지 널리 확대됨.²⁾ 실제 심리전은 현대전에 있어서 독립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무력전·경제전·정치전·외교전의 영역을 공유하는 ‘작전적’ 특성을 지님.³⁾
- 대북 심리전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 내재된 잠재적 욕구를 분출시켜 북한의 지도부를 압박하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본 연구는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김정은 정권의 대남 심리전 양상, 통일 대비 심리전 운용 방향과 정책대안을 주 연구내용으로 할 것임.
- 대남 무력도발 시 자위권 차원의 ‘원점 타격’이란 군사적 조치는 당연한 정책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억제력 완비 및 향후 북한 태도와 연동한 ‘정권교체’ 대안 또한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 제기⁴⁾

2. 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해야 하는가?

- 첫째, 북핵문제 접근, 북한 변화 유도, 통일 준비과정에서 심리전이 갖는 역할과 기능이 매우 크기 때문임.
 -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은 중·단기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작용할 것이며, 남북 간 조성된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켜 상호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⁵⁾
 -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과 북한군으로 하여금 남북한의 실상과 외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식의 변화와 이념적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충격이 각계각층과 북한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북한군의 호전성과 전의는 떨어질 것이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남한에 대한 동경과 패배의식을 조성, 지도부에 대한 이념적 동의, 맹종의 폐습이 약화되도록 작용

- 심리전이 군사 분야는 물론 정치·외교·경제·사상전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은 주민의 의식 변화, 사상 개조, 정권교체, 체제급변까지도 유발하는 역할을 할 것임.
 - 대북 심리전은 북한 지도층 및 주민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전략임. 데이비스(J. C. Davis) 또한 “정치적인 안정 및 불안정은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견지하는 일반적 심리상태에 달려 있다.”고 지적⁶⁾
- 둘째, ‘착각’에 빠진 동북아 국가들의 유동적 입장, 급변하고 있는 정세의 위중함에 맞서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대북 심리전은 상황관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임.
- **북한**은 일부 나아졌으나 ‘제2의 고난의 행군’ 상황(배급제 붕괴, 장마당 확산, 식량 부족, 전력난, 연료부족)으로 한류 영향 및 한중관계 심화, 5.24 조치의 지속 등으로 김정은 정권은 어려운 국면이며 단기성과도 내야 할 상황. 그런데 북한은 과거처럼 ‘핵공갈’, 무력도발과 버티기로 한국으로부터 양보받고 러·중 간 ‘줄타기’ 외교로 실리를 확보, 일본을 활용해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착각(핵을 고수하는 한·중·러·일 모두 북한을 적극 지원하기에는 한계)⁷⁾
 - **중국**은 북한 비핵화 관련 국내 여론, 유엔 대북제재 동참이 불가피하나 ‘순치관계(唇齒關係)’인 북한을 임계점 이상 압박하는 데는 부담.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짐으로써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일본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국에게 있어 북한이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대)
 - **미국**은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으로 비핵화 관련 북한의 과거행태에 대한 학습효과를 중시, 구체적 약속 없으면 ‘6자회담’은 물론 ‘미·북 대화’도 없다는 입장. 그런데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동맹을 기대하는 착각(한일 역사적 관계, 일본 우경화, 한중관계 고려 시 **3각동맹**은 원천적으로 불가)
 - **일본 아베정권**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집단적 자위권 지지에 힘입어 군사대국화와 보통국가화를 추구. 미국처럼 한미일 3각동맹의 틀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미국이 일본 보통국가화를 용인하는 것은 중국견제라는 정치군사적 목표 때문임), 북한카드 효용성에 대한 착각
 - **한국**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과 ‘드레스덴 선언’을 염두에 두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 공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대화의 지속을 통한 긴장 완화와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 관철, 5.24 조치 지속 등 현안 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한국은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심리전이 군사 분야는 물론 정치·외교·경제·사상전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은 주민의 의식 변화, 사상 개조, 정권교체, 체제급변까지도 유발하는 역할을 할 것임

**통일 대비 남북관계
개선·북한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모멘텀은
우리 위상과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담긴
정책 유연성을
바탕으로 북한에
출구를 제공, 대북한
레버리지를 강화해야
하며, 그 추진전략은
대북 심리전인 바
슬기롭고 꾸준한
추진이 절실함**

- 통일 대비 남북관계 개선·북한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모멘텀은 우리 위상과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담긴 정책 유연성을 바탕으로 북한에 출구를 제공, 대북한 레버리지를 강화해야 하며, 그 추진전략은 대북 심리전인 바 슬기롭고 꾸준한 추진이 절실함.

3. 독일·베트남 통합과정에서의 심리전 역할과 교훈

- 독일통합과 심리전⁹⁾
 - 초기 서독의 대동독 심리전은 동독 지도자들의 경계심과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고자 두 정부, 두 국가, 두 국민을 인정하는 실질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
 - 첫째, 서독의 신동방정책이 강조한 심리전의 주제는 ‘접근을 통한 변화’와 ‘자결권에 의한 통일 구현’에 둬. 『동방정책의 구상자인 에곤 바(Egon Bahr)는 동독 사회의 공산주의 이념을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의 종료를 핵심 주제로 선택.” 접근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점차 변화되어 나갈 대상으로 인식. 서독의 심리전 담당자들은 안정된 양독관계를 보장하면서 서독 체제의 우월성을 동독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독일국민의 자결권에 의한 통일 구현을 전략의 주제로 삼았음.』
 - 둘째, 서독 정부는 동족인 동독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동질성 회복을 주요 심리전의 주제로 선정. 서독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 주제는 ‘동독인들의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려 국민적 지지와 지원을 확보. 이를 활용하여 독일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불가피성을 여론화
 - 셋째, 외교정책 차원의 심리전 주제는 ‘윤리 및 책임성’을 강조하는 데 둬. 경제대국이지만 군사적 소국인 서독으로서는 한계성을 인식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윤리 및 책임성을 강조하였던 것임. 『서독은 나치 통치시절 고통을 받았던 국가에 대하여 솔직한 사과를 하고 경제적으로 배상하는 데 정성을 쏟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서독은 민주사회를 정착시키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모범적 국가임을 내외에 알려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
- 베트남 통합과 심리전
 - 미군과 구월남 정부는 주민들에게 ‘진실된 정책’을 충분히 알려주고

설득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기본적 욕구인 먹는 문제와 거처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소홀. 민심 이반으로 군사작전의 효율성마저도 위협을 받게 됨(심리전의 실패가 전쟁에서 패배로 연결).

- 통일 베트남 정부는 미군과 월남군의 폐해를 적극 알리는 성공적인 심리전을 수행함으로써 통합 후 ‘전체 인민’의 지지하에 수복지역 행정관리 및 치안확보, 새로운 제도와 통일국가 수립에 성공함.
- 공산화된 베트남의 경우 민족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명목하에 과거 월남 정권의 핵심계층에 대한 ‘제한된 숙청’을 단기간에 종결, 신속한 군사통합을 마무리해 저항세력의 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 통일 베트남은 통합 후 수복민은 물론 외국인들이 지닐 수 있는 생존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차단하고자 안전보장과 생활경제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통합을 위한 계획들을 신속하게 집행
- 예상과는 달리 적대국 체류자들에게도 비교적 관대한 처우로 국가 이미지를 고양, 외교적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

4. 북한의 대남 심리전 양상

- 대남 심리전 목표 → ‘남조선 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구현
 - 군사차원의 경우 대남 심리전 목표는 우리 군내부에 ‘반정부 세력’, ‘중북세력’을 배양, 군내 혼란 조성 및 한미동맹 체제를 손상시키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음. 김정일 사후에도 줄곧 한국군 기강의 붕괴를 목표로 대남 군사심리전을 강화해 왔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구현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⁹⁾
 - 사회차원의 경우 북한의 대남 심리전 목표는 한국 정부 및 지도자에 대한 흑색선전과 정치 선동을 통하여 남남갈등을 확대하는 데 두고 있음. 이 또한 ‘통일전선전략’을 변함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특히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유의해야 할 것임.¹⁰⁾).
 - 문화·체육인 교류 역시 ‘통일전선전략’ 실현을 목표로 심리전 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전형적 행태
- 김정은은 장성택 등 정적 제거 및 공포정치로 권력 상층부를 장악, 적대적·도발적 대남 심리전을 전개해 3대 세습체제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
 - 김정은 정권은 정권 승계 초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서해상에서의 잦은 도발, 핵전쟁 운운하는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체제 단속 및 남남갈등 조성을 통해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김정일 사후

**대남 심리전 목표 →
‘남조선 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구현**

**최근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는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평가,
다층적 외교와 대남
위협·평화공세
심리전을 강화**

- 야기될 수 있는 내부혼란이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단기간에 차단하는 데 성공).
- 2014년 2월 사격 도발 이후 7월 14일 현재까지 200발 이상의 포, 로켓, 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 4차 핵실험 위협, 도서 상륙훈련, 비무장 지대 도발 등으로 긴장 수준을 높이고 있음.
 - 북한은 6자회담에서도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대화의 기회를 모색하거나, 한국 측으로부터 실익을 챙기면서도 우리 정부가 마치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조차도 방해하는 것처럼 선전
 - 북한의 목적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적대감과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국제적 비난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위장평화공세’로 한국 정부를 곤란에 처하도록 고도의 정치심리전을 수행 중(2000년 4월 전 단살포 중지합의 → 2012년 7월 21~25일, 1만6,000장 대남 선전전단 발견¹¹⁾)
- 최근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는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평가, 다층적 외교와 대남 위협·평화공세 심리전을 강화
- 남북자(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협의를 고리로 일본과의 대화 강화 및 경제지원 확보, 러시아와의 협력 확대 등 실리를 취하고 이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자 하나 ‘실속’은 없어 보임.¹²⁾
 - 2014년 1월 16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중대제안’에 이어 6월 30일 ‘특별제안’을 통해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 급기야 7월 10일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미녀’ 응원단을 보내기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하는 등 파상적인 대남 유화 심리전과 7월 14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100여 발의 방사포·해안포 발사와 같은 강도 높은 무력시위로 ‘화전양면(和戰兩面)’의 심리전을 펴고 있음(무력충돌 회피, 확전예방 차원에서 북이 탄착지 고려한 것은 유의미함).

5. 통일대비 심리전 관련 정책 제안

가. 대북 심리전 방향

-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유의
 - 외형상 안정되어 보이나 혼란스러운 정도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볼 때 체제 내부는 불안정한 상태로 판단됨.

○ 대북 심리전의 기본 방향

- 중·단기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시켜 혼란을 최소화하여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통합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음.
- 향후 대북 심리전은 구서독처럼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를 목표로 삼아 공식·비공식 접촉기회의 확대, 지도층 및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범정부·범국가·세계사적 과제¹³⁾
- 심리전의 핵심 내용은 북한 주민은 물론 여론 주도층(지도층 중심)의 대남 적개심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핵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관계개선이 불가능한 것 또한 확신시켜야 함.

○ 북한 지도부가 ‘확실한 인식’을 갖게 할 수준의 억지력 보장과 정치적 의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심리전 추진 원칙은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균형성·일관성에 기반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비협력-협력이 동반됨을 주지토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북한은 경제실리를 쟁기겠다는 ‘단기적·기만전술적 거래’가 아닌 핵포기 등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함. 북한이 공언한 것처럼 서북도서, 전후방 지역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적 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선행 조치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인 핵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보일 경우, 이를 남북한 신뢰구축 및 평화공존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북한경제 살리기의 통큰 지원’도 가능할 것임.

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1): 군사적·비군사적 조치

- 확실한 보복을 담보할 전력 구비 및 사회적 합의 기반 강화
 - ‘맞춤형 억제전략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미국의 의지 명문화
 - 최근 북한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은 핵을 사용할 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대두
 - 4 Grim Scenarios
 - * 근거: K. Lieber(Georgetown U.), D. Press(Dartmouth College) 교수의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Escalation” 발제문(2014.6.10, KIDA 회의실)
 - 북한이 핵 사용 시 딜레마 상황이 예견되더라도 반드시 응징한다는 원칙을 명문화 할 필요(북한 태도를 보아 신(新)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착수, “New Guideline” 필요성 정책적 검토를 제안)

**북한 지도부가
‘확실한 인식’을
갖게 할 수준의 억지력
보장과 정치적 의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심리전
추진 원칙은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균형성·일관성에
기반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비협력-협력이
동반됨을 주지토록
해야 할 것임**

**한미연합전력에
기반한 ‘확실 인지’
수준의 보복전력이
있어야 심리전
실효성이 배가될
것임. 적(敵)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억제력
구비는 방위의
선결조건이자
심리전에서 우위를
보장하는 자산임.
북한이 아무리 비대칭
전력을 건설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정권붕괴’로
연계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포함**

1. <u>Accept cease fire</u> • Halt operations	• Sets dangerous precedent • Encourages proliferation by adversaries and allies
2. <u>Punitive Nuclear Response</u> • Target NK leadership • March on Pyongyang • Missile defense	• Targets may be located in major population center • <u>Risks several more nuclear hits on allied territory</u>
3. <u>Continue campaign</u> • March on Pyongyang • Missile defense	• <u>Risks several more nuclear hits on allied territory</u> • Permanent damage to global alliance network
4. <u>Nuke / conv counterforce</u> • March on Pyongyang • Missile defense	• May not destroy them all • If U.S. strike nuclear – kill many noncombatants

- 군사적 조치로 태평양사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의 지속적인 폭격기 유지정책(Continuous Bomber Presence: CBP) 및 핵투발 능력을 갖춘 제7함대 잠수함 전력의 한반도 인근순시(Patrol) 명문화(MCM 의제화)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orea Air Missile Defense: KAMD) 구축 및 주한 미군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운용
 - KAMD 조기 구축 및 주한미군 THAAD 배치 허용으로 북핵 및 미사일 위협 상쇄
 - 중국을 향해서는 중국의 북핵 책임론, THAAD가 방어위주의 무기임을 강조, AN-TPY-2 레이더의 중국 군사력 감시효과는 레이더 가동에 따른 부수적 사안임을 강조
- 킬 체인(Kill Chain) 조기 구축
 - Kill Chain 전력은 선제공격에 사용될 수도 있는 전력이므로 주변국 설득도 병행. 기술적 수준 및 효과성, 비용 등 문제가 거론되나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력

- 한미연합전력에 기반한 ‘확실 인지’ 수준의 보복전력이 있어야 심리전 실효성이 배가될 것임. 적(敵)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억제력 구비는 방위의 선결조건이자 심리전에서 우위를 보장하는 자산임. 북한이 아무리 비대칭 전력을 건설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쇄되고 ‘정권붕괴’로 연계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포함¹⁴⁾
-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감대 조성으로 남남갈등의 틈새 최소화
 -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장?
 - 통일 부담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고통을 감내할 물질적·정신적 준비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 어떤 유형의 통일을 목표로 할 것인가?
- 북한 스스로의 체제급변 외 인위적 급변사태를 유도할 것인가?
- 대주변국 정치외교 심리전
- 현 대북제재, 통일대박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의 관계 정리
- 내부적으로 통일 염원을 확산하고 통일비용 등 고통을 분담할 각오를 해야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통일의 모습(de facto unification → 완전 통일)으로 접근할 수 있음. 인위적 급변사태 유도는 위험하며 북한의 자연적 급변상황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임. 전략적 소통 차원의 정치외교 심리전 수행으로 주변국들을 지지세력화가 급선무(미국의 북한 진입문제, 중국의 ‘개런티’, 일본의 동의를 중요)¹⁵⁾

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2): 수행 방안

- 심리전은 ‘솔직한 정보’를 담고 ‘끈질긴’ 수행 필요
 - 가능한 수단을 동원(방송, 세미나, 기자 회견, 발간물, 사이버 공간 등) 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솔직한 정보를 일관되게 전파
 - 북한 당국자들에게는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과’를 넘어 비핵화와 연계, 반대급부가 없는 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천명(‘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하는 한 협력에는 분명한 한계, 진정성은 핵문제 관련 전향적 입장이 전제되어야 함을 전파)
 - 과거처럼 버티던가, 도발 강도를 높이면 굴복·양보·챙겨주는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야 함(5.24 조치가 현 정부 말기까지도 간다는 우리 자신의 각오도 필요).
 - 한국을 전쟁 도발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북한 주민의 분위기를 활용,¹⁶⁾ 이는 해외정보 유입 및 한류문화 동경의 결과로 대남적개심 약화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됨.
- 특사파견 → 정상회담안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할 시점
 - 북한 당국의 변화가 없는 한 국제사회 제재 지속, 5.24 조치의 유지
 - 장기간 경색된 남북관계 탈피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필요함.
 - 회담 대비 보수층 반발 및 원칙의 훼손을 감내할 정도로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한지 정책적 검토는 필요(필자는 현 여건 하 해제 반대쪽임)
 - 장기화된 현 경색국면 돌파를 위해 특사교환 및 정상회담의 적기라고 판단
 - 북한이 선호하는 ‘특사교환’ 방식에 대한 검토를 제안함.

심리전은 ‘솔직한 정보’를 담고 ‘끈질긴’ 수행 필요

결론적으로**김정은 정권이 핵을****포기 안 하고 도발을****중단하지 않을 경우****동북아 안정을 위하여****‘레짐 체인지’도****국제공조를 통해****추진할 수 있음을****심리전 메시지에****담아야 할 것임**

- 김정은 정권은 내부적 안정을 위해 외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이므로 명분과 실리가 보장되면 문호를 점차 개방할 것임. 현재 북한은
외국 기업의 투자 유인은 물론 자강도를 제외한 8도 지역 관광특구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김정은으로서도 북한 주
민들에게 줄 가시적 선물을 만들 필요가 있음. 외국 기업, 외국 관광객
보다 남한 기업·남한 관광객을 선호하는 북한을 활용¹⁷⁾
- 대남 적개심 완화하도록 접근
 - 과거 서독 정부의 심리전은 독일 통일에 대하여 동독 주민과 주변국들
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없애고 그들을 지원세력으로 만드는 데 진
력하였음을 명심¹⁸⁾
 - 다양한 채널과 기회를 통해 ‘보복없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
도록 전략적 소통 및 선전홍보전 강화
 -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은 병영국가인 북한과 달리 인권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후 동족인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합의된 사항이며 공식적인 정책임을 자세히 알려 주
어야 함.
 - 구서독이 ‘무리한 통일정책’을 접어두고 동족인 동독인들의 고통을 최
소화하려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핵심 심리전의 정책으로 선정한 것처
럼 민족동질성 회복에 집중
 - “5.24 제재조치와 인도적 지원을 밀접히 연계할 필요가 없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국민정서를 감안, 상황별 대응은 필요하되 융통성을 발
휘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제안
- 결론적(結論的)으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 안 하고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東北亞) 안정을 위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담아야 할 것
임. 한편, 북한 및 주변국을 향해 급변사태 발생 등 유리한 상황 도래
시라도 이를 기회로 삼아 북한을 강점하거나 흡수통일하지 않을 것이
라는 통일정책을 이해시키는 정치·외교 심리전 또한 더욱 강화할 필
요가 있음. 북한 핵은 체제 생존용이 아니라 고립과 악순환의 뿌리이자
김정은 정권 패망의 고리임을 ‘당근과 채찍’으로 설득, 전파해 나가야
할 것임.¹⁹⁾ 나아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 기능 및 통일과정
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인 일본과의 냉각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냉정히
경계할 필요가 있음.

주석

- 1) 역사적 사례들은 심리전이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 수단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1972년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수행된 닉슨의 ‘중공’ 방문을 통한 외교관계 개선, 구소련 후르시초프 집권기 제3세계에 대한 곡물원조 및 경제지원, 최근 북한의 미녀 응원단 파견 등 ‘위장평화공세’와 미군 유해 송환, 일본인 납북자 관련 북일 간 대화, 시진핑 주석의 북한에 앞선 방한 외교, 일본 아베총리의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 활용 제한 등이 좋은 예이다.
- 2) 이광현, 「현대사회와 심리전략」(서울: 화일, 1993), p.42; 심진섭, 「심리전 이론과 실제」(서울: 학지사, 2012).
- 3) 김종열, 「정보의 역할」(서울: 우문사, 1970), p.130; 전계서 심진섭(2012); 조영갑, 「국방심리전략과 리더십」(서울: 북코리아, 2006), pp.25, 35-36.
- 4) 2014년 6월 30일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은 원점타격은 함참의장 재직 시 원칙을 정립했음을 강조하고 이를 자위권 차원에서 유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연합뉴스 속보, 2014.6.30); 2010년 12월 함참의장 재직 시 장관은 “현장지휘관의 자위권적 재량으로 위협근원 제거”를 단호히 강조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0.12.9.).
- 5) R. D. McLaurin, “Psychological Operations and National Security,” in Ron D. McLaurin (ed.), *Military Propaganda: Psychological Warfare and Operation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2), pp.1-3. McLaurin은 그의 글에서 국제관계에서 심리전은 상대국의 인식, 태도, 견해 및 행태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았으며 그것은 모든 수준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보았다.
- 6) James C. Davi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7, 1962.
- 7) KRIS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14-05(No. 208), “김정은 체제의 핵 및 대남 정책 노선 진단”(서울: KRIS, 2014.4.14).
- 8) 독일 통합과정에서의 심리전의 역할은 다음 자료에서 다루어 졌다.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 관리 외교정책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서병철, 「공산권 붕괴와 독일 통일」(서울: 계축문화사, 1991); 이영기, 「독일통일의 해부」(서울: 국제언론문화사, 1990); 육군본부, 「두개의 군과 하나의 조국」(계통대: 육군본부, 1994); 이광현, 「현대사회와 심리전략」(서울: 도서출판 파일, 1993); 하정열,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 방안」(서울: 팔복원, 1996).
- 9)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3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550. 김일성은 본 논문에서 동구사회주의권의 경제난에 따른 체제 기반의 약화 및 정책변화 노선에 영향을 받아 '80년대 중반 이후 과거 노동계급 주도의 통일전선보다는 포괄적인 '민족통일전선'의 구축을 역설한 바 있다; 김동성,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전술과 대남 정치심리전,” 「전략연구」통권 57집(서울: KRIS, 2013.3), pp.309-349.
- 10) 이상호,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와 대응방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집 1호(2011.8), pp.263-290.
- 11) 연합뉴스(2012.7.26) 보도 참조.
- 12) 송화섭, “북·일 합의의 의미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서울: KRIS, 2014.7), pp.20-22.

- 13) 최근 북한 주민의 대남의식 조사는 전쟁 도발국가로 한국을 꼽는 숫자가 매우 적음을 밝히고 있어 심리전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되도록 해야 함(조선일보, 2014.7.9). 2013년 KIDA 연구진이 전체 탈북자 조사, 군출신·일반주민 구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 도출.
- 14) 이명철, “북한의 긍정적 변화 유도를 위한 우리의 전략,”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서울: KIDA Press, 2012.3).
- 15) 남성욱, “예상가능한 통일 시나리오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KIDA 정책포럼에서 발제된 모노그래프(2014.7.15) 및 토론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재작성함.
- 16) 정상돈, “전쟁 가능성과 도발국가에 대한 북한의 인식,”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서울: KIDA Press, 2013.11).
- 17) 김석진,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실태와 전망”(KRIS: 서울, 2014.7), pp. 26-28). 북한 경제는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최빈국 수준인 바 김정은은 문제해결을 위해 개선책(확실치는 않으나 ‘포진 담당제’ 등)을 내놓고 있어 제한적이거나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 18) 김세연, “한반도 통일시 위기 관리 방안 연구,” ’97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통일정책환경(I)』(서울: 통일원, 1997), p.96.
- 19) 서울신문(2014.8.1), “미 대북정책은 전략적 아닌내... 압박·제재기조 변함없다” 보도 참조. 글린 데이비스 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가 아닌 아닌내정책이며, 국제적 공조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따른 비용은 높이고 무기수출은 원천봉쇄하여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함.

❖ 저자 약력

■ 고성윤

現 한국국방연구원(KIDA) 명예연구위원, 국방부/해군 자문위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92년 5월 미국 Univ.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 199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대외협력실장, 군사전략실장, 군사기획센터장, 국방현안연구위원장(부원장 대우) 을 역임함. 주요 연구분야는 남북한 관계/한미관계/군사력 평가 및 전력건설/PKO 등 안보 및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수십 편의 핵심 연구과제를 수행. 주요 저서로는 단행본 *Rediscovering Asia*(2010), 『대한민국 세계로 나아가는 길(2011)』, 『거목일마(2013)』 등이 있으며, 연구보고서로 「국방현안과 대책(2012)」 외 60여 편, 번역 및 분석보고서 책임공저로 「QDR 2010: KIDA의 분석과 QDR 요약(2010)」, 「NPR 2010: KIDA의 분석과 NPR 요약(2010)」 등이 있음. 연구원 재직 시 백 여회 이상의 국내외 인터뷰 및 방송해설 안보전문가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2013년 이후 현재까지 50여 편의 안보칼럼을 메이저 중앙일간지에 기고, 오피니온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대표 포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2013년 10월 1일 수훈.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낙훈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